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류지영 · 신동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통계센터 한국교육고용패널팀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요 약》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년 상승함.
 -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자율화 정책이 실시된 2003년 이후 2008년까지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3배 수준에 달함.
-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높은 원인으로는 대학 운영 재원 중 국고지원 등의 공적인 고등교육 투자 비율이 낮고, 학부모나 학생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이후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는 미국 방식인 '취업후 상환제도' 를 도입하여 학자금 상환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KEEP의 6~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졸업자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음.
 -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보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국·공립대학 졸업자보다 사립대학 졸업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많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자금 대출 경험이 많음.
- 대학등록금이 인상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고등교육 재정의 정부 보조 확대일 것으로 판단됨.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I. 문제제기

▣ 지속적인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생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정부는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사립대학은 1989년부터, 국·공립대학은 2003년부터 자율적 등록금 정책을 허용함. 이를 기점으로 대학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현재 연간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이르게 됨.

〈표 1〉 연도별 대학등록금과 물가 상승률 비교

(단위: 천원, %)

연도	국립대학		사립대학		국립대와 사립대 차이(B-A)	물가 상승률
	금액(A)	인상률	금액(B)	인상률		
2000	2,193	-	4,511	-	2,318	-
2001	2,300	4.9	4,779	5.9	2,479	4.1
2002	2,471	7.4	5,109	6.9	2,638	2.7
2003	2,654	7.4	5,452	6.7	2,798	3.6
2004	2,903	9.4	5,776	5.9	2,873	3.6
2005	3,115	7.3	6,068	5.1	2,953	3.1
2006	3,426	10.0	6,472	6.6	3,046	2.8
2007	3,836	9.7	6,917	6.9	3,081	2.2
2008	4,167	8.6	7,383	6.7	3,216	4.7
2009	4,190	0.6	7,420	0.5	3,230	2.8
2010	4,384	4.6	7,587	2.3	3,203	2.9
2011	4,402	0.4	7,761	2.3	3,359	4.7

주: 1) 4년제 대학 기준임.

2) 국립대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산한 금액임.

3)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고, 2011년도는 1-4월 평균 수치임.

자료: 반상진, 『대학등록금 정책,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재인용.

- 지난 10여 년간 대학등록금의 누적 인상률은 국립대학이 70.3%, 사립대학이 55.8%로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자율화 정책이 실시된 2003년 이후 2008년까지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3배 수준에 달함.
 - 사립대의 경우도 매년 평균 5%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립대학에 비해 등록금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가계 부담은 매우 큼.
- 세계 각 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임. 2006~2007년도 대학등록금을 환산하여 살펴볼 경우, 우리나라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세계 각국 대학등록금 수준 비교(2006~2007년) (단위: PPP US dollar 환산액)

구분	1인당 GDP(A)	대학등록금		비율	
		국공립대	사립대	국공립대	사립대
미국	46,337	5,943	21,979	12.8	47.4
한국	26,191	4,717	8,519	18.0	32.5
일본	33,577	4,432	6,935	13.2	20.7
호주	39,002	4,035	7,902	10.3	20.3
캐나다	38,353	3,693	-	9.6	-
프랑스	33,301	1,206	-	3.6	-
이탈리아	31,898	1,195	4,355	3.7	13.7

주: 1인당 GDP는 2007년 기준 PPP US dollar 환산액임.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10: OECD Indicator. Table B5. 1a;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0).
 반상진, 『대학등록금 정책,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재인용.

▣ 대학등록금이 가계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차경욱·정순희(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교육비 지불을 위해 가계에서 사용하는 재정 원천의 구성 및 사용 비율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대학교육비의 지불 원천은 소득, 저축, 학자금 대출, 학비보조금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불 원천은 저축, 소득 순으로 조사.

- 대부분 부모의 재정자원을 이용하여 대학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한나·이희숙(2010)은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학교육비가 가계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음.
 -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자료 중 2007년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
 - 공교육비의 수준과 사교육비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지출액이 감소하여 대학 교육을 위한 지출이 다른 가계지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0년 동안 가구당 가계소득 대비 대학등록금 비율을 살펴보면, 국립대학의 경우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 11.2%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2010년까지 10%대를 유지하고 있음. 사립대학의 경우도 1990년에 14%에서 출발하여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7년에 22%에 이룸. 이후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실정임.

〈표 3〉 가구당 가계소득 대비 대학등록금 비율 (단위: %)

구분		'80	'85	'90	'95	'03	'04	'05	'06	'07	'08	'09	'10
1인당 GDP대비 대학등록금 비율	국·공립 대학	28.9	40.4	22.9	23.9	17.5	17.9	18.7	19.5	21.0	19.6	19.1	18.3
	사립대학	69.2	58.7	38.1	46.6	36.0	35.5	36.4	36.8	41.1	34.7	33.8	31.6
가구당 가계소득에 대한 대학등록금 비율	국·공립 대학	28.9	15.5	8.4	8.1	8.5	8.8	9.2	10.2	11.2	10.2	10.2	10.0
	사립대학	23.9	22.5	14.0	15.7	17.5	17.6	17.8	19.0	22.0	18.1	18.0	17.4

주: 1) 대학등록금이나 1인당 GDP는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03년 이후에는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최순영, 『대학등록금, 재정실태 분석보고서』, '06 국감정책자료집(2006). 반상진, 『대학등록금 정책,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재인용.

-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등록금의 한 원인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인 투자가 낮은 점을 들 수 있음.
 - 부담 주체별로 고등교육투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에 국고지원이 21.4%, 대학등록금 수입이 59.5%, 기타 수입(재산수입, 재단전입금, 기부금, 수수료 수입 등)이 19.1% 정도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투자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 부담 주체별 고등교육투자의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총 세입	국고지원 (대학예산)	대학등록금 수입 (학생)	기타 (사회, 법인)
2005	181,884 (100.0)	33,108 (18.2)	93,739 (51.5)	55,037 (30.3)
2006	202,713 (100.0)	33,925 (16.7)	102,917 (50.8)	65,871 (32.5)
2007	225,893 (100.0)	35,759 (15.8)	141,137 (62.5)	48,997 (21.7)
2008	238,078 (100.0)	48,247 (20.3)	150,415 (63.2)	39,416 (16.5)
2009	248,184 (100.0)	53,106 (21.4)	147,711 (59.5)	47,367 (19.1)

주: 1) 모든 수치는 세출결산금액 기준이고, 2008, 2009년은 세출 예산임.
 2) 국·공립대 총 세입은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총계임.
 3) 사립대 총 세입은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학교기업회계 등 학교회계의 총계임.
 4)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은 수업료 및 입학금, 기성회비를 포함한 금액임.
 5) 기타는 재산수입, 재단전입금(사립), 기부금, 수수료 수입 등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반상진, 『대학등록금 정책,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재인용.

-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8,920로 OECD 평균 \$12,907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이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투자의 20.7%만이 공공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표 5〉 OECD 국가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현황 비교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GDP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1.5	2.4	3.1	1.3	1.5	1.1
공공재원	1.0	0.6	1.0	0.7	0.5	0.9
민간재원	0.5	1.9	2.1	0.6	1.0	0.2

〈표 계속〉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중(%)	공공재원	69.1	20.7	31.6	35.8	32.5	84.7
	민간재원	30.9	79.3	68.4	64.2	67.5	15.3
학생 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US \$)(PPP환산액)		12,907	8,920	27,010	15,463	14,201	13,823

주: 1) PPP(Purchasing Power Parity exchange rates); 구매력 평가기준 환율.

2) GDP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비율에는 전체 교육비에 대한 행정경비 비율 미포함.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2010). 통계는 2007년 기준임. 반상진, 『대학등록금 정책,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재인용.

- ▣ 본고에서는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제도의 변화 과정과 실태를 살펴보고, KEEP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자 특성별 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Ⅱ. 학자금 대출 제도와 현황

- ▣ 최근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등록금 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미국식 학자금 대출 제도의 도입 시기인 2005년을 전후로 변화를 보이고 있음.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열의와 보편화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학자금 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절실한 상황임.
- 학자금 대출 제도는 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 측면과 관련하여 경제위기에 연체율이 상승하거나 낮은 채무상환율로 인해 정부재정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과 대출 금리의 상승 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감이 커져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 1975년부터 2005년 8월까지의 금융기관을 통해 등록금의 상당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액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이자보전방식’에 의한 대출 제도를 운영함. 그런데 이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학자금 대출 관련 예산운영이 경직성을 띠고 대출 인원의 증가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협함.
 - 금융기관의 소극적 참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만족할만한 학자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접근 가능성이 낮았음.
- 2005년 하반기에 도입된 ‘SLBS방식’은 신용보증 방식을 채택하여 기금운용상의 수익가능성을 보장하여 재정 경직성을 해소하고자 함.
- 이 제도는 미국식 제도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손위험을 제거하고,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발행하여 투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장기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방식임.
 -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가 높아져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학생의 고금리 문제와 연체자 증가 문제를 초래함.
 - 시장 상황과 발생구조에 따라 좌우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부문의 개입이 미약할 수 있고, 학생들의 상환능력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제도임.

〈표 6〉 학자금 대출 제도의 변천 및 운영 방식

구분	이자보전 방식 (’05.1학기 이전)	SLBS 발행 방식 (’05.2학기~’09.1학기)	재단채권 발행 방식 (’09.2학기~)
대출주체	금융기관	금융기관	장학재단
사무관리	학술진흥재단	주택금융사내 학생신용보증기금	장학재단
수혜인원 (학기 평균)	18만 명	28.6만 명	33만 명
대출한도 (1인당)	2천만원	4천만원(대학) 6천만원(대학원) 9천만원(전문대학원)	4천만원(대학) 6천만원(대학원) 9천만원(전문대학원)
대출금리	8.25~9.2%	6.59~7.80%	5.8%
정부 이자지원	소득 무관(4%)	소득수준별 차등화 (무이자~7.8%)	소득수준별 차등화 (무이자~5.8%)

〈표 계속〉

구분	이자보전 방식 (’05.1학기 이전)	SLBS 발행 방식 (’05.2학기~’09.1학기)	재단채권 발행 방식 (’09.2학기~)
대출기간	총 14년 :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총 20년 :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총 20년 :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취업후 학자금 상환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채권보전	부모 연대보증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정부 보증 (학신보 보증)	정부 보증

자료: 한국장학재단(2010) 제공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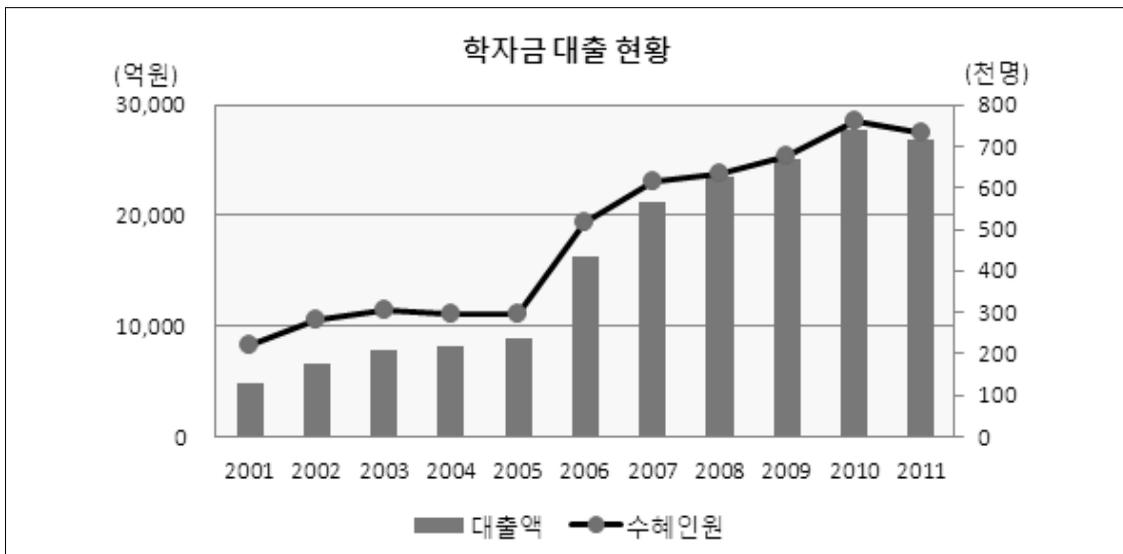
- 2009년 5월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대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함.
 - 재단채권 방식은 대출희망 학생이 시중은행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을 통한 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는 제도임. 재원조달 방식은 신용보증과 유동화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음.
 - 단, 이러한 방식은 재단의 직접채권 발행을 통해 유동화 비용을 절감하여 정부의 개입 재량을 확보하여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함임.
 - 그러나 이 방식은 대출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은 커짐.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사업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제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든든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용자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 이 중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ICL)³⁰⁾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최대 100만원)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임.
 - 상환 방법은 등록금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생활비의 경우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기초생활 1~3분위는 무이자(유예기간), 4~7분위는 납부유예, 8~10분위(다자녀가구)는 거치기간 이자 납입, 상환기간 원리금 납입(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임.

30) ICL : Income Contingent Loan(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SLBS 방식이 도입된 2005년부터 학자금 대출 금액과 수혜 인원이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음. 이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각종 혜택을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기금)

[그림 1] 학자금 대출현황(2001~2011)

- 2011년 대출 현황 분석 결과, 대출자와 대출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감소한 원인으로는 국가장학금의 확대와 대출제한 대학 지정 등을 들 수 있음.
 -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대출에 비해 2010년에 비해 그 비율이 증가함.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일반상환 대출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용자 측에서는 여전히 대출 조건의 완화, 금리 인하와 같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청년층 실업률이 심각해짐에 따라 연체자가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124만 명(2011년 6월 기준) 중 채무불이행자는 6만 8,050명(5.5%)이며, 총 연체금액은 3014억 원임. 특히, 6개월 이상 빚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은 2만 9,07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Ⅲ. KEEP 자료 분석 결과

1. 분석 자료 및 내용

- ▣ 본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조사의 6차(2009)~7차(2010)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실태를 분석함.
 - KEEP 6차년도 조사부터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관련 문항을 포함함.
 - 재학 중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기 수, 학자금 대출 총액, 학자금 대출 유형, 대출 상환금 연체 여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
 - 6차 또는 7차년도에 학자금 대출 관련 문항을 응답한 대졸자 1,114명(2년제 482명, 4년제 63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대졸자의 요인별(성별, 대학 학제별, 대학 소재지별, 대학 설립 형태별, 전공계열별, 월평균 가구 소득별 등)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를 분석함.
 - 대학 학제별 학자금 대출 학기 수, 대출금 총액, 등록금 총액, 등록금 총액 대비 학자금 대출금 비율 등을 분석함.
 - 대학설립 형태별 학자금 대출금 상환 연체 여부 실태를 분석함.

2. 분석 결과

▣ 2년제 대졸자의 30.5%, 4년제 대졸자의 33.1%가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자금 대출 경험 유무 조사 결과, 2년제 대졸자 남성은 20.8%, 4년제 대졸자 남성은 27.9%로 학제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년제, 4년제 대졸자 모두 34%정도로 비슷한 수준임.

▣ 여성의 학자금 대출 경험 비율은 남성보다 약 10%p 더 높게 나타남.

- 남성의 학자금 대출 경험 비율은 24.2%인 반면, 여성은 34.1%로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2년제 대졸자의 경우 그 차이가 약 13%p정도로 4년제(약 6%p)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표 7〉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학자금 대출 여부 (n= 1,114명)						
	남자		여자		전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계
2년제 대학	20.8%	79.2%	33.9%	66.1%	30.5%	69.5%	100.0%
4년제 대학	27.9%	72.1%	34.2%	65.8%	33.1%	66.9%	100.0%
전체	24.2%	75.8%	34.1%	65.9%	32.0%	68.0%	100.0%

▣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 졸업자 10명 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자 비율은 37.9%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30.5%)보다 7.4%p 높게 나타남.
- 사립대학 졸업자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비율은 34.1%로 국·공립대학 졸업자(29.2%)보다 4.9%p 높게 나타남.

〈표 8〉 대학 설립형태 및 소재지별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 4년제 대학

	학자금 대출 여부 (n= 615명)						
	국·공립 대학		사립 대학		전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계
수도권 소재 대학	31.3%	68.8%	38.4%	61.6%	37.9%	62.1%	100.0%
비수도권 소재 대학	28.8%	71.3%	31.0%	69.0%	30.5%	69.5%	100.0%
전체	29.2%	70.8%	34.1%	65.9%	33.3%	66.7%	100.0%

▣ 대학 전공계열에 따른 학자금 대출 경험은 의약계열이 39.7%로 가장 높고, 인문계열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의약계열 전공자의 39.7%, 자연계열 전공자의 39.3%, 예체능계열 전공자의 36.7%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반면, 인문계열(25.0%), 교육계열(28.3%)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9〉 대학 전공별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 4년제 대학

		학자금 대출 여부 (n= 619명)		
		예	아니오	전체
전공계열	인문계열	25.0%	75.0%	100.0%
	사회계열	30.6%	69.4%	100.0%
	교육계열	28.3%	71.7%	100.0%
	공학계열	30.5%	69.5%	100.0%
	자연계열	39.3%	60.7%	100.0%
	의약계열	39.7%	60.3%	100.0%
	예체능계열	36.7%	63.3%	100.0%
	전체	33.1%	66.9%	100.0%

▣ 월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학자금 대출 경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학자금 대출 경험자 비율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학자금 대출 경험자 비율은 낮아져 월평균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대출 경험자 비율이 23.6%로 나타남.

〈표 10〉 가구 소득별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학자금 대출 여부 (n= 1,080명)		
		예	아니오	전체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3.3%	56.7%	100.0%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2.0%	68.0%	100.0%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1.8%	68.2%	100.0%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8%	71.2%	100.0%
	700만원 이상	23.6%	76.4%	100.0%
	전체	31.8%	68.2%	100.0%

▣ 2년제, 4년제 대졸자 모두 등록 학기 중 절반 이상의 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년제 대졸자는 등록 4학기 중 2.6학기에 걸쳐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4년제 대졸자는 등록 8학기 중 4.1학기에 걸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재학 중 받은 학자금 대출 총액은 2년제 대졸자는 860만원, 4년제 대졸자는 1,296만원으로 나타남.

- 2년제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860만원으로, 이는 학기당 평균 215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4년제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1,296만원으로, 이는 학기당 평균 162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임.

▣ 대학 재학 중 납부한 등록금 총액 중 60~70%정도를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 재학 중 납부한 등록금 총액 중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등록금 비율은 2년제 대졸자가 69.1%, 4년제 대졸자가 57.6%로 나타남.

〈표 11〉 대출 학기 수, 대출 총액, 등록금 대비 대출액 비율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전체
대출 총 학기 수(학기)	2.6	4.1	3.3
학자금 대출 총액(만원)	859.6	1295.6	1071.4
등록금 총액(만원)	1244.9	2248.6	1706.7
등록금 총액 대비 대출 총액 비율(%) (대출 총액/등록금 총액)	69.1%	57.6%	62.8%

▣ 학자금을 대출 받은 대졸자 중 30%정도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립대학 졸업자의 29.7%가 학자금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공립대학 졸업자(24.1%)보다 5.6%p 높은 수준임.

〈표 12〉 대출금 상환 연체 경험 여부

	대출금 상환 연체 여부 (n= 346명)		
	예	아니오	전체
국·공립 대학	24.1%	75.9%	100.0%
사립 대학	29.7%	70.3%	100.0%
전체	29.2%	70.8%	100.0%

IV. 요약 및 개선방안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대학자율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 2000년 이후부터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년 상승함.
 - 이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높은 원인으로는 대학의 운영 재원 중 국고지원 등의 공적인 고등교육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학부모나 학생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이후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최근에는 미국 방식인 ‘취업후상환 제도’를 도입하여 학자금 상환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KEEP의 6-7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학 졸업자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많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수도권 보다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전공별로는 의약계열과 자연계열이 다른 전공에 비해 대출 경험 이 많음.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비율은 납부한 등록금 총액의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 대출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또한 응답자의 30%가 대출금 상환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시위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서울시 에서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하 검토가 발표되면서 그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의 변화는 재원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이용자의 부담 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숙제임. 또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나 오기도 전에 채무를 떠안게 되고, 이런 가운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나오지 않아 신용불량자의 양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자녀의 대학등록금 부담은 부모 세대의 은퇴 준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함.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인 해서 가난이나 계층을 되물림하는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대학등록금이 인상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보임.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고등교육 재정 마련에 있어서 정부 보조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반상진(2010). ‘대학등록금정책, 이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교육비평 제29호.
- 교과부, 재정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2009).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도입방안’, 한국장학재단 자료실.
- 박정훈, 정용운(2010).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정성: 갈등관계의 시뮬레이션 분석연구.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 송선영(2006). 고등교육 재정개혁의 국제동향 연구. 교육발전연구 제22권 제2호.
- 차경욱, 정순희(2006). 대학교육비 지불원천에 관한 분석: 소득, 저축, 학자금대출의 사용여부와 사용액. 한국국가정관리학회지, 24(5).
- 문한나, 이희숙(2010).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권 3호.
- 교육인적자원부(2005).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개요.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kosaf.go.kr>

〈부록〉 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

구분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IBR)	
개요	도입 배경	무상고등교육에서 유상교육(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면서 실시	좌동	기존대출방식에서 학생 대출 부담을 경감	학자금 대출자 채무 부담 완화
	도입 시기	1989	1995	1992	2009. 7. 1
	근거 법률	고등교육지원법	고등교육법	학자금대출법	대학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 (2007 제정)
	관리 기관	정부, 고등교육기관, 국세청이 역할분담	학자금관리 공사 (SLC)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삼원운영	연방교육부 (FSA)
재정	보조 방식	정부보조	정부보조	정부보조	없음
	재원 조달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민간자본(금융기관, 대학)
대출 자격 및 조건	대출 자격	모든 대학생	모든 대학생	모든 대학생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대출 금액	등록금	3천 파운드 내 수업료, 생활비	수업료(상한), 생활비	수업료(상한), 생활비
	장학 제도 병행	연방정부장학프로그램 (교육부 예산의 2%)	무상장학금후잔액 ICL 대출	무상장학금과 공존	무상장학금과 공존
상환방법	회수 주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조세 체계와 미연계
	상환 기간	10~12년(최대25년)	-	평균 10.3년('08)	최대 25년
	회수 시점	일정소득 발생시 (국민소득중앙치 \$36,185)	기준소득 발생시 (1만 5천 파운드)	기준소득 발생시 (\$15,964)	재량소득 발생시 (빈곤선의 150% ↑)
	선납 제도	15%~25%할인 (선납시 이자)	-	-	-
	상환 방식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무상환+자발적 상환(10%보너스)	기준소득 초과분의 9%	기준소득 초과분의 10%	재량소득의 15% 이하
	총상환금액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상환 능력 부재시	상환유예 및 면제 (저소득층, 파산 및 사망)	상환유예 (국가평균소득 85%이하인 자)	상환유예	25년 이후 미상환액 면제

출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도입방안, 한국장학재단(2009)